

# 민주, 야권 대통합론 꿈이었나

대표적인 친노 핵심인 유시민 전 장관이 친노 신당 참여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의 야권 대통합론에 제동이 걸렸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와 재야 인사들도 각종 정치적 모임을 결성하면서 각개 약진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민주세력의 분열이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9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 "신당을 추진하는 분들이(참여를) 요청하고 있는데 입당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친노 핵심 인사로, 지난해 초 민주당을 탈당할 유 전 장관은 입당 시점과 관련, "연계 하면 좋을지 그분들(신당 추진파)이 판단해 이야기해주면 그때 입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관계설정에 대해 "특정 정당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정당과 경쟁관계에

## 유시민 "민주당과 연합 생각 안해" 친노신당 합류

###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재야·시민단체도 각개 약진

있을 수밖에 없다"며 "영호남은 일단 독재체제인 만큼 어떤 연합도 필요없지만 나머지 지역의 경우 진보개혁세력에 동의하는 목표에 따라 민주당 뿐 아니라 진보정당들과도 연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합이나 연대는 서로 독자성을 인정할 때 필요한 것"이라며 "민주당과 같은 당을 하는 것은 전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유 전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설과 관련, "현재 서울시장도 아니고 출마 계획이 없다"면서도 "살아가는데 절대 '그렇다, 아니다' 말하기는 어렵고, 정치를 시작한 것이나 국회의원을 한 것도 다 원해서 된 것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 친노신당 핵심 인사는 "유 전 장관이 내달 중순 청담준비위원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와 재야인사들도 각개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원순 변호사 등 시민사회 인사들은 이날 오후 '희망과 대안' 창립식을 갖고 정치참여 준비에 들어갔다.

또한, 친노통합파와 재야인들이 주축을 이룬 '민주통합 시민행동'도 '반MB 연합'을 내세워 최근 발족했다. 특히, 지난 16일 이회찬 전 국무총리를 대표로 해 창립한 범친노계 모임인 '시민주권 모임'은 지방선거 연대를 위한 상설기구인 '승리 2010, 시

민의 힘' 구성을 공개 제안해 높은 응답률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재보선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둘 경우 야권 분열이 가시화되면서 민주당의 숙원인 통합론이 더욱 멀어질 수 있다는 회의적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야권의 분열은 '다 같이 죽자'는 것"이라며 "친노 신당은 분열의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권과 시민사회 세력이 각개약진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큰 틀에서 연대를 모색하는 흐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대통합론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정치 지형에 지각변동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19일 오후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희망과 대안' 창립식에서 우의 보수단체 회원들이 행사 진행의 문제를 제기하며 단상을 점거해 식이 중단된 가운데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정세균 민주당 대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낙선운동과 차별화...역풍 우려 시각도

### '정치 무개입' 원칙 깬 시민사회단체 진로는

진보 성향의 시민운동 진영인 '희망과 대안'의 19일 정치 참여 선언은 진보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000년 낙선운동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정치 무개입' 원칙을 깬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이들이 원칙을 깨면서까지 정치 참여를 선언한 것은 한국 사회에 대한 나름의 위기감이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모임 관계자는 "시민운동이 2000년 낙선운동 이후 노골적으로 정치권에 개입하지 않았는데 최근 우리 사회 분위기를 볼 때 다시 정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희망과 대안'이 정치 참여를 공식 선언했지만 당장 눈이 띄는 정치

적 활동을 하기에는 내부적으로 의견 정리가 덜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000년 낙선운동 형태보다 한 단계 진화한 운동방식을 선택할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시 낙선운동이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네거티브' 방식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좋은 정치 세력을 발굴하고 추천해 정치권에 참여시키는 '포지티브' 방식의 당선 운동을 벌인다는 것이다.

모임의 행보와 관련, 한 관계자는 "단순히 특정정당을 이기기 위한 접근이 아니라 전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 정당 인물이 풀뿌리 운동으로 성장한 대안 후보를 찾아 지원하는 데에 활동 범위를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 후보까지 각종 선거에 출마시킬 것인지

에 대해선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진영에서 대통령 선거 등의 '대안 후보'로 주목받은 박원순 변호사의 진로도 불투명하다. 박 변호사 본인의 발언과 모임 내부의 입장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에 생각이 있었다면 모임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선거에 나가고 안 나가고는 이미 떠난 문제"라며 "절대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선거 불출마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모임 내부에서는 딱 부러지게 선을 긋지 않고 있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개인 결단만으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박 변호사의 현실정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박지경기자 jkpark@

## 광주시 '부패척결' 팔 걸었다

### '청렴도 자기진단제' 구축 등 제도 보완

광주시가 자체 정화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보완에 나선다.

시는 우선 19일부터 시행되는 청렴도 시스템에 공개 공무원이 자신의 청렴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청렴도 자기진단제'를 구축해 조직 내의 반부패 분위기를 조성한다.

'청렴도 자기진단제' 경우 개인 청렴도 테스트 10문항과 나의 청렴도 상식 10문항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모든 직원들이 반기별로 1회 이상 수시로 자기 진단에 참여해야 한다.

또 앞으로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개정 시 과도한 규제 등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사관실에 '부패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실·과에서는 자치법규 제·개정 시 사전에 감사관실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해 심의를 받아야 하며, 감사관실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부패영향을 평가해 그 결과를 해당 실과로 통보하게 된다.

/\*윤현식기자 chadol@

## "중·고교 성폭력 예방교육 너무 형식적"

### ■시의회 시교육청 시정질문

광주시의회 제183회 임시회 시정질문 나흘째인 19일 광주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 정책에 대해 질문·답변이 진행됐다.

◇이명자 의원(민주·비례대표) = 광주 C영구 성추행 사건 등 청소년 성범죄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일선학교의 성관련 교육이 단순 성교육 차원에서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역 중학교의 경우 성교육이 연 6.1시간인데 비해 성희롱 예방 교육은 1.2시간, 성폭력 예방 교육은 1.7시간에 그쳤다.

특히 성 지식이 풍부한 고등학교 교과목도 성교육(5.5시간)에 치우쳐 정작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성희롱(1.1시간)·성폭력(1.3시간) 예방 교육은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후진 의원(민주·북구2) = 광주시내 299개 초·중·고 가운데 무상급식이 이뤄지는 학교는 4.7%인 14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전부가 751개교 중 472

개교(62.8%)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남은 837개교 중 193개교(23.1%)였다.

또 학교급식 학부모 부담률도 광주가 79.7%(1천172억원)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 77.3%, 대전 76.2%, 울산 71.3%, 인천 69.9%, 대구 69.5% 등의 순이었다. 반면 교육청 부담은 18.3%(269억원), 지자체 부담은 0.7%(9억원)에 불과했다.

◇전우근 의원(민주·북구3) =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전문계 고등학생들마저 취업이 안되고 있다고 따졌다.

전 의원은 최근 3년간 전국 기능경기대회 광주지역 입상자 취업현황을 보면 총 8명 중 중견업체에 취업한 학생은 고작 1명 뿐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기능경기대회 입상으로 기능인으로서 검증된 우수한 인재들마저 취업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며 "입상자들의 처우 개선과 전문계 고등학교의 진화를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 "김정일, MB 초청설은 오해"

### 美 백악관 이례적 해명

미국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 평양방문을 초청했다는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과 관련, "오해(misunderstanding)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방북 초청 사실을 부인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국방부 당국자의 발언 배경에 대해 "우리가 말하려고 한 건 최근 북한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런 맥락(context)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에도 북한의 조문단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방문을 얘기하기도 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당국자는 "그외에 다른 구체적인(specific) 방북초청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국방부가 잘못 브리핑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백악관의 이 설명이 최종적인 것이며, 국방부의 별도 브리핑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北 MB 초청 긍정 검토해야"

### 민주 박지원 정책위의장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1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이명박 대통령 평양초청설과 관련,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 남북정상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변방에서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방문한 북한의 조문단도 이 대통령 초청 문제를 나에게 물었다"며 "나는 '남북정상회담이 꼭 필요하니 이번에 청와대를 방문해 초청의사를 밝히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광주시가 자체 정화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보완에 나선다. '청렴도 자기진단제' 구축 등 제도 보완

광주시가 자체 정화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보완에 나선다. '청렴도 자기진단제' 경우 개인 청렴도 테스트 10문항과 나의 청렴도 상식 10문항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모든 직원들이 반기별로 1회 이상 수시로 자기 진단에 참여해야 한다.

또 앞으로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개정 시 과도한 규제 등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사관실에 '부패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실·과에서는 자치법규 제·개정 시 사전에 감사관실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해 심의를 받아야 하며, 감사관실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부패영향을 평가해 그 결과를 해당 실과로 통보하게 된다.

/\*윤현식기자 chadol@

두번 슬프게 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1566-4499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동천로 100
전화	1566-4499

인대중상조 1566-4499